

▲朴炳燾氏自「감사원」회근 대학병원에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내조제를 문제삼았다. 감사원법 제20조 일부의 제23조 선행적 감사사항을 실행하면 민간기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보기 힘들다. 무슨 법근거로 병원을 감사시켰는가. 또한 무단 조제하였다고 하는 항정선생의 항소도 항쟁 불결의 구체적 조제과정을 예시해 달라.

지중의료보존회와 시범지역의료보존회의 의료기관에 지불치 못한 1백56억 진료비지불을 강제 지불할 것인가. 농어촌 지역의료보존회와 관련된 재정적자상태의 전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지연지급문제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제1회판. 또한 최근 보훈료를 평균 30% 인상한 것은 전수율적이라 그 다음 보훈제정의 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노상상태에 있는 환자의 장기를 이식했다 해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되는 노상인정과 의학기술 발달로 장기이식이 활발해지고 국내 호르몬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주치의의 정의를 신장자로 할 것인가 노상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두 부부자인 보사부의 인정판결이 필요하다.

▲宋永福氏(○)「보진소」등의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원의 신변보장과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수혈의 다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관련, 헌혈기피현상 대부분 혈액응고부족사태는 없는가. 또한 피하자의 대한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의료보존회와 고시에 문제가 있다. 전담적인 한의사로서 시범부정이 있었는가 하면 불필요한 등

해의유학생의 응시자격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람의 생명은 다름없는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다른 판리가 약하다. 좀더 엄정한 자격관리를 통한 내실화 방안을 밝히라.

▲申英順氏(○)「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의 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우려할만큼 환자수가 줄지 않고 있다. 선진국수준은 유병률이 1%인데 우리나라는 85년도 기준 2.2%이다. 결핵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70만 명으로 추정되는 결핵환자들을 위한 필요예산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가족제사사업을 홍보나 서비스 위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구자질향상과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선진화와 보건진료원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보건소산하 모자보건센터를 활용, 타 아사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구상을 정책화할 의사가 있는가.

▲金仁永氏(○)「현재 병원세탁물을 처리하는 곳은 전문세탁가 한 곳도 없고 보수유도 없는 실정이다. 감염원전파와 위생상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병원세탁물의 대한 대책으로 「세탁사」 제도를 만들어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할 의사가 있는가.

일부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아실의 다소 문제가 있다. 관계규정을 위반, 미연해 부자성을 발견해야 한다.

▲申榮國氏(○)「대규모병원과 중소규모병원간의 병상가동을 등 병원의 불균형이 많다. 대규모 병원은 병상가동이 1백%를 넘는데다 입원대기기간도 서너달인데 반해 중소규모병원의 병상가동률이 60~70%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잘못 된 것이라고 보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대한병원협회자료에 따르면 88년까지 병상수가 15% 증가했다.

늘어난 반면 지난해는 1.7% 하락했는데 환자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 병상부족현상의 원인 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대도시의 전문의 인력이 남아돌고 농어촌지역 등은 전문의 확보를 위한 등 의사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

한 의사수가 고시 시범부정과 관련, 공정한 의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金忠兆氏(○)「보사부가 대법원에 계고한 업무보고서가운데 「항후」 지역의료보존회를 1~2년정도 더 운영해 본 뒤 보훈재정추진의와 관련응급진료를 면밀히 분석, 의료보존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통렬주의를 고려했다는 뜻인가.

국회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료보존회인 267개는 일반의 3%, 캐나다의 2%에 비해 너무 높다. 또 이 수치는 평균보훈료집수율을 80%로 잡았을 때 40%가 된다.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의료보존관리운영체계를 통렬해야 한다.

일부 지역의료보존조합에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무시하고 특채를 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조정의료보존회의 보훈료금 내리면서 농어촌지역의 의료보존율을 최근 72.5%나 인하여는 것과 관련, △의료보존회의 재정적자원인 부정이 △이를 해결키 위한 통렬주의 의료보존관리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朴英淑氏(○)「오버지 등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대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에 대해 대처방안을 수립하라. AIDS수혈자, 발전과 관련, 동성애자 등 위험집단의 감염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가명으로만 이들 관리대상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을 위한 행정고시를 발표해 놓고도 시행일자를 아직 밝히지 않아 시범개발청에 차질이 있다. 시범일자 지역이유와 앞으로 신약 개발지원을 위한 구체적 내용도 「李結鎔氏(○)」현행 의료보존약가를 전면 재조정하여 적정수준으로 인하 고시하라. 고시된 의료보존약가와 실제판매가가 차이나는 것은 보사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제도의 형질태만으로 보는데 이를 보완 시정해 나갈 대책을 밝히라.

수입의약품이 신기술을 무시한 채 수입가격의 20배까지 올린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효능효과까지 과장 표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속내용과 위반업소및 제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밝히라.

▲鄭基榮氏(○)「국내 전업종가운데 가장 많은 광고를 하여 오남용을 조장, 약화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의약품광고는 반드시 보다 많이 규제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약회사보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광고비 지출비율이 무려 3~7배나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광고비 지출비율이 높은 제약회사에 광고선전보다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방안이.

□ 조망

▲金鍾仁氏(○)「보사부 장관이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등 재발발의 병원 신장증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고가특수의료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앞으로 관련 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 과잉설치를 규제해 나가겠다.

병원에서의 간호사 법정인원 확보를 위한 기조를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

대한병원협회에 업무보고한 「1」 2년후 지역의료보존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지역 의료보존에 국한된 얘기다. 직장 의료보존의 보다는 지금도 잠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재정적자 등 문제가 있는 지역의 보훈을 1~2년후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의료 관리운영비가 많은 것은 보훈료 징수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감사원이 병원내 조제를 감사한 법정근거는 약사법33조와 항정선생의 항소판리법 6조에 따른 것이다.

보사인정문제는 현재 醫協 등 관련 단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의료기술발달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장기이식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의회,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직종 및 시범지역 의사의 진료비제정은 관제부처와 협의,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

지난 1월9일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병원세탁물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병원세탁물 처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4월부터 시행키 위해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의탁할 수 있는 세탁물의 범위 △병원세탁물의 세탁처리방법 △세탁업소의 시설 및 장비기준 △종사자 위생관리 및 보수교육 △의료기관세탁전문업체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진제도 현행으로 개선키 위해 특진기관, 특진인사자격, 적용항목, 적용요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리나란 환자에게 제공되던 급식이 치료식과 일반식으로 구분하는 법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病協의 치료식과 일반식에 대한 급식원가 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훈료를 지시한 적이 있어 보고가 된 대로 이를 토대로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병원환자 급식기준을 마련하겠다.